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

경제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09년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일본의 민주당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친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제공, 에너지 사업 중심의 신경계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을 꾀하였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시 생각한 발전 방법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였다. 하지만 신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의 원전 활성화 계획을 세워 가는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쓰나미를 동반한 3·11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일본인의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었고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원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원전 재가동을 고려하였으나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제로'의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원전제로' 표명과 동시에 원전 재가동을 의미하는 애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과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측,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노다 정권은 확실한 정책 결정을 회피하고 다음 내각으로 그 결정을 미룬다.

결과적으로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탈원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의 원전은 모두 중지 또는 점검 중으로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다.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유권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피해 정도를 크게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사회적 피해, 즉 일본 전체의 피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지진 발생 전보다 발생 1년 후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된다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감소시키는 편을 선호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의식이 정치 참여 또는 정당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원전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치 참여 및 방향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는 경제적 이슈 등 다른 요인에 있는 것이지 유권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목 차

1. 서론
2.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의 변화
  - 가.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에너지 기본계획'
  - 나.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 다. 일본 에너지 정책의 변화: 탈원전
3.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
  - 가. 일본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3·11 대지진의 피해인식
  - 나. 3·11 대지진 피해 인식과 일본인의 정치의식
  - 다. 3·11 대지진 피해 인식과 일본인의 투표행태
  - 라. 3·11 대지진의 행정적 피해 사례: 동북지방의 선거 운영 피해
4. 나아가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국내 정치와 한일 관계

## 1. 서론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의 대지진 발생 이후 약 3년 정도가 지났으나 피해 지역의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약 29만 명이라는 엄청난 피난민들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일본은 물론, 해외에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일본인들의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
- 마지막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에 관해 간략하게 논의함.

## 2.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의 변화

### 가.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에너지기본계획'

-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3년에 제정된 에너지정책기본법을 바탕으로 책정되었음. 에너지정책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안정공급확보(Energy security), 환경에의 적합성(Environment), 시장원리를 활용한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의미하는 3E의 실현임. 일본의 원자력 정책도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정해짐. 에너지기본계획은 3년에 한 번씩 법적 재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음. 민주당 정권 시기인 2010년 6월에 제2차 개정이 실시되었음.
- 제2차 개정 시에도 ① 에너지안전보장확보, ② 지구온난화 대책, ③ 에너지를 기축으로 한 경제성장 실현이 중시됨. 세계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국제 경쟁 심화 및 중동의 리스크 증가로 원유가격 상승이 예상되었고, 교토의정서 등에서 일본의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표명한 상태였으며,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세계 경제가 대불황을 겪으면서 각국의 산업 구조 및 성장 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고용 창출을 모색함. 일본은 제2차 개정에서 3E실현과 함께 에너지를 기축으로 한 경제성장과 에너지 산업구조 개혁의 목표를 제시함.

- 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로 ① 에너지 자급률 및 화석 연료의 자주 개발 비율 증대(38% → 약 70%), ②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전원 비율 증대(34% → 약 70%), ③ 가정 내 발생 이산화탄소 50% 감소, ④ 산업부문의 세계 최고 에너지 이용 효율 유지 및 강화, ⑤ 국내 기업군 에너지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톱 셰어(top share) 획득을 제시함.
- 위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강조된 방안이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이었음. 당시 민주당 정권은 2020년까지 9개의 원자력 발전소 신설 및 2030년까지 최소한 14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증설, 2007년 현재 26%인 국내 총 발전량 대비 원전 비율을 53%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음. 이 외에 민주당 정권이 강조한 내용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도입 확대가 있음. 이에 관련된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각회의 결정이 2011년 3월 11일에 이루어짐.

### 나.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의 각의 결정이 진행된 날(3월 11일)에 3·11 대지진이 발생함. 일본 국내 관측 최대 규모에 쓰나미가 동반된 최악의 재해임. 2013년 8월 시점에서 조사된 3·11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약 19,000명, 피난인 수가 약 29만 명에 이룸.
- 3·11 대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발전소의 설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 방사선이 누출되는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함.

### 다. 일본 에너지 정책의 변화: 탈원전

-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후, 일본 내에서 탈원전론이 확대됨. 2011년 5월 간 수상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이는 원전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됨. 간 내각은 2011년 6월 국가전략실 내에 ‘에너지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전략담당대신(장관)이 의장을, 경제산업대신과 환경대신이 부의장을 맡아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함.
-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간 수상의 조기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2011년 8월 간 수상이 사임을 표명하고 이후 노다 수상이 뒤를 이음(2011년 9월 취임). 노다 수상은 원전재가동론자였음.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의 각의 결정이 진행된 날(3월 11일)에 3·11 대지진이 발생함. 일본 국내 관측 최대 규모에 쓰나미가 동반된 최악의 재해임*

**민주당은 2012년  
중의원선거 대비  
메니페스토에  
탈원전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존의  
원전재가동에서  
원전제로로 방향을  
바꿈**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2012년 5월 홋카이도의 도마리(泊)원전 3호기의 정기 점검 시작 이후 일본 내 원전이 42년 만에 모두 정지됨. 이후 여름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를 새로운 안전 감시 체제 하에서 재가동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노다 수상이 이를 허용하여 2012년 7월에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가 재가동됨(2013년 9월까지 운행).
- 2012년 6월에 열린 에너지환경회의에서 노다 정권은 2030년 시점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2010년 현재 원자력, 재생가능, 화력의 비율이 26%, 10%, 64%인데 이에 대해 2030년까지 시나리오 1은 원자력 0%, 재생가능 35%, 화력 65%, 시나리오 2는 각각 15%, 30%, 55%, 시나리오 3은 각각 20~25%, 25~30%, 50%로 제시함.
- 노다 정권은 세 시나리오 가운데 국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에 포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는 노다 정권이 시나리오 2를 채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음. 하지만 중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의 움직임을 의식한 민주당 내에서 점차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또한 8월 조사된 노다 내각의 지지율이 초창기 50%대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원전에 대한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 민주당의 위기감이 높아짐.
- 민주당은 2012년 중의원선거 대비 메니페스토에 탈원전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존의 원전재가동에서 원전제로로 방침을 바꿈.
- 2012년 9월에 에너지환경회의에서 공표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 2030년대 원전가동제도가 가능해지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주요 전원으로 활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사업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이러한 모순된 계획은 시민단체 등의 원전반대파와 경제계 및 관련 지자체 등의 원전 추진파를 동시에 포섭하기 위한 제안으로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에너지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는 요구도 발생함.
- 민주당은 의원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에너지 전략 입장을 표명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관한 당내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함. 노다 정권은 2012년 9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예정되었던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결정을 미루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 함. 이러

한 원인에는 원전정책과 관계된 타국과의 관계도 있었음. 미국의 경우, 자국 내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고 동맹국이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원전제로를 추구할 경우 핵관련 기술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함. 또한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은 프랑스의 원전건설회사 아레바(AREVA)사와 원전 부문 제휴를 맺고 있어 일본이 원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큰 수입원이 상실될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일본의 전력회사로부터 10톤의 플루토늄을 보관하고 있고 MOX 연료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탈원전을 지향할 경우, 수입문제와 함께 방사선 폐기물의 귀속문제가 걸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2012년 12월에 진행된 중의원선거에서 원전정책도 주요 이슈였지만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탈원전에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의 압승으로 3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하지만 자민당의 승리를 통해 유권자들이 탈원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본인의 의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 3.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

#### 가. 일본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3·11 대지진의 피해인식

- 사용된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부터 매월 3,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로 3,000명 가운데 약 1,000명은 매월 추적조사로 진행됨. 본 절의 내용은 해당 조사 가운데 3·11 대지진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 2012년 3월과 2013년 1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임. 일본 전체가 입은 피해를 ‘사회적 피해’로, 유권자 개개인이 입은 피해를 ‘개인적 피해’로 구분함.
- 사회적 피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와 개인적 피해 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함. 2012년 결과에는 개인적 피해 변수의 영향력의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개인적 피해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남. 2012년에는 개인의 피해와 사회적 피해, 즉 일본 전체의 피해를 별개로 구분했던 반면에 2013년에는 연관 지어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다시 말해, 개인적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는(직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일본 전체, 즉 사회적 피해도 크게(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됨. 바꾸어 말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지진

*2012년 12월에  
진행된 중의원선거에서  
원전정책도 주요  
이슈였지만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탈원전에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의  
압승으로 3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지진 발생지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대지진 피해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또한 지진 발생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인식은 시간이 흘러도 지진으로 인한 사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표 1>).

〈표 1〉 사회적 피해 인식 정도의 규정 요인  
(Ordered Logit Model)

	2012년 조사	2013년 조사
개인적 피해	0.027	0.078*
성별	-0.349***	-0.169*
연령	0.003	0.006
학력	-0.149**	-0.127**
소득	-0.052*	-0.021
기혼여부	0.108	0.034
TV이용정도	0.067	0.034
신문이용정도	0.014	0.026
인터넷이용정도	0.068**	0.017
_cut1	-4.118	-3.525
_cut2	-2.183	-1.576
_cut3	1.027	1.503
N	2,948	2,725

\*\*\* p<0.001, \*\* p<0.01, \* p<0.05

출처: 境家 2013, 59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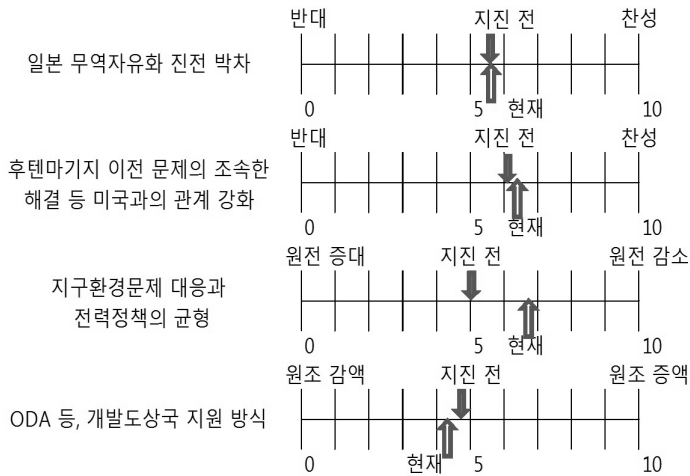
- 2012년과 2013년 모두에서 여성의 피해인식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조사되었고 저학력 유권자일수록 비관적인 인식을 보임. 2012년 결과에서는 저소득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에는 유의하지 않음.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권자가 지진과 상관없이 일본의 경제상황을 보다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이 외에 TV 이용 정도, 신문 이용 정도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2년 결과에서 인터넷 이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보임. 즉,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피해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나타남(<표 1>).

### 나. 3·11 대지진 피해인식과 일본인의 정치의식

- <표 1>의 조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 다른 분석 결과에서 개인적 피해인식에 따른 정치관심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보다 사회적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

남. 본 설문조사 외에 NHK방송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지진 이후 일본인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발표됨. 3·11 대지진 이후 일본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 각 정책쟁점에 대한 지진 전후의 태도 변화



출처: 境家 2013, 62 <그림 5>

- 2012년 3월 설문조사에서 1년 전(대지진 발생 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무역자유화’, ‘미국과의 관계 강화’, ‘지구환경문제 대응과 전력’, ‘ODA 등의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물음. 일본의 무역 자유화 추진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물은 질문에 현재와 대지진 발생 전의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남.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관해서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등을 조속한 해결 등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대지진 발생 전과 비교하여 현재 찬성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아졌음. 지구환경문제 대응과 전력에 관해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의 국제 공약을 중시하고 원전 의존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보다 이산화탄소 공약을 단념하고 원전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음.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대지진 발생 전보다 원조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아졌음. 대지진 후 일본인의 의식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국제적 관계보다 자국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일본인의 보수화 경향이 강해지는 하나의 단면으로 보임(<그림 1>).

- 2013년 1월 조사에서 각종 복구 대책에 대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함. ‘부흥재원을 위한 증세’, ‘부흥재원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삭감’,

**지구환경문제 대응과 전력에 관해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의 국제 공약을 중시하고 원전 의존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보다 이산화탄소 공약을 단념하고 원전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음**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원인이

3·11 대지진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없음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 재가동’, ‘방재 관련 공공사업 확대’, ‘거주 지역 근처로 지진 파편 도입 및 처리’ 등에 대한 인식을 ‘절대 실시해서는 안된다(1)’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5)’까지 5척도로 질문함.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부흥 대책은 공공사업 확대이고 그 뒤를 공무원 인건비 삭감, 지진 파편의 도입 및 처리, 부흥 증세, 원전 재가동 순으로 나타남.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히 대지진 발생지 근처에서 강하게 나타남.

- 대지진 발생 후 일본인의 내셔널리즘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2012년 9월 조사에서 ‘너무 강한 대응이었다(1)’부터 ‘너무 약한 대응이었다(5)’까지 5척도로 질문한 결과와 독도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상대국에 양보해야 한다(1)’부터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도 영토는 양보할 수 없다(5)’까지 역시 5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결과적으로 사회적 피해 인식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지난 대응에 대해 약한 대응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영토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유의하게 나타남. 즉, 사회적 피해 인식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강한 내셔널리즘의 경향을 보임.

### 다. 3·11 대지진 피해인식과 일본인의 투표행태

- 2012년 12월 조사와 2013년 1월 조사 대상(패널데이터)의 결과에서 대지진 후 정치관심이 증가된 것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치 참여, 즉 2012년 중의원선거의 투표 참여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투표 참여가 낮았음(실제 투표율도 낮았음). 3·11 대지진 이후 정치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러한 관심이 정치 참여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 대지진에 대한 피해인식과 투표향방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지진의 피해인식에 따라 민주당보다 자민당 또는 일본유신회를 선택한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즉,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원인이 3·11 대지진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없음(<표 2>).<sup>1)</sup>
- 민주당 정권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에는 사회적 피해인식에 따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사회적 피해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민주당 정권과 국회(민주당 외의 정당 포함)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조사됨. 다시 말해 사회적 피해인식이 심할수록 3·11 대지진 발생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등, 정치 전반에 관한 신뢰도가 낮

다고 볼 수 있음.

〈표 2〉 중의원선거 비례대표구 투표 향방의 규정 요인  
(Multinomial Probit Model)

	자민당	일본유신회
사회적 피해 인식	-0.165	-0.108
개인적 피해 인식	-0.133	-0.128
성별	0.397*	0.329
연령	-0.031***	-0.019*
학력	-0.292*	-0.32**
소득	-0.023	-0.061
기혼여부	0.165	0.085
정치관심	0.060	0.039
정수	3.199***	2.706***
N	679	

\*\*\* p<0.001, \*\* p<0.01, \* p<0.05

출처: 境家 2013, 68 <표 7>

### 라. 3·11 대지진의 행정적 피해 사례: 동북지방의 선거 운영 피해

- 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4월의 지방선거가 2011년 9월과 11월로 미뤄진 지역이 다수 발생함. 2012년 중의원선거에도 대지진 피해가 다소 선거 운영에 영향을 미쳤음. 대지진 피해로 인한 선거 운영에의 피해는 유권자 확정(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투표 등록 등), 선거운동 관리(입후보 접수, 정보 제공 등), 투표 및 개표(기일 전 투표 사무, 당일 투표 및 개표 사무) 등에서 나타남.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선거 지연 등 행정적인 피해를 초래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리 행사 등에도 악영향을 미침.

## 4. 나아가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국내 정치와 한일 관계

- 원전의 의존도를 높이려던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은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탈원전으로 돌아섬. 이후 탈원전에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선거와 2013년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지만 유권자 의식 역시 원전 재가동을 희망한다고 볼 수 없음. 자민당의 승리는 원전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2012년 중의원선거에도 대지진 피해가 다소 선거 운영에 영향을 미쳤음. 대지진 피해로 인한 선거 운영에의 피해는 유권자 확정,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 등에서 나타남. 원전의 의존도를 높이려던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은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탈원전으로 돌아섬. 자민당의 승리는 원전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대지진의 영향 자체가  
직접적으로 일본의  
보수화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일본이  
국면한 심각한 경제  
문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대지진 발생 후 한국은 빠르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함. 약 520억이라는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모아 전달했으나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이 예정하고 있던 교과서 발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됨. 이는 매뉴얼 사회라는 일본 사회의 한계로 지적됨.
- 2012년 중의원 선거와 2013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보수화 경향이 더욱 강해짐. 대지진의 영향 자체가 직접적으로 일본의 보수화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일본이 국면한 심각한 경제 문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경제 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내외적 어려운 입장에 처한 일본 정부와 국민 입장 모두에서 보수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일본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보수화 경향이 당분간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이에 이, 눈에는 눈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여유 있는 자세로 온건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 상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주석

- 1) 민주당을 기준으로 한 자민당 투표, 일본유신회 투표 결과.

#### 참고문헌 및 자료

- 이현웅. 2013. “일본의 원자력저어책-민주당정권과 자민당정권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현출. 2013. “일본 정치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국회입법조사처보』 18, 64-69.
- 전진호. 2011.4.26. “3.11 대재난 이후의 일본과 한일관계.” 『kifs 이슈와 대안』 1-3.
- 河村和徳. 2013. “東日本大震災被害地の選挙管理におけるマンパワー不足.” 『選挙研究』 29(1), 43-56.
- 河村和徳 外. 2013. 『被災地から考える日本の選挙-情報技術活用の可能性を中止に』 東北大学出版会.
- 經濟産業省. 2009. “新成長戦略(基本方針)について.”
- \_\_\_\_\_. 2010. “エネルギー基本政策.”

- 国家戦略室. 2012a. “エネルギー環境に関する選択肢.”  
 \_\_\_\_\_. 2012b. “革新的エネルギー環境戦略.”
- 境家史郎. 2013. “東日本大震災は日本人の政治意識・行動をどう変えたか.” 『選挙研究』 29(1), 57-72.
- 資源エネルギー庁. 2010. “日本のエネルギー2010.”  
 \_\_\_\_\_. 2011a.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固定価格買取制度について.”  
 \_\_\_\_\_. 2011b. “わかる新エネ.”
- 善教将大. 2013. “福島第一原発事故後の原子力世論—その規定要因の実証分析.” 『選挙研究』 29(1), 73-86.
- 復興庁. 2013.8.22. “全国の避難者等の数.”

자민당 홈페이지(<https://www.jimin.jp/eco/condition>).

『朝日新聞』.

『毎日新聞』.

『読売新聞』.

#### ❖ 저자 약력

##### ■ 경제희

現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함. 주요 업적으로 “일본 민주당의 창당 및 집권 과정과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의 변화”(『현대정치연구』 6(2), 2013), “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한국과 국제정치』 28(2), 2012)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